

# 행락철 도로변 위험한 불법 노점상 '골머리'

전남 곳곳 도로 갓길 좌판 줄지어 차량 급정지 등 교통사고 유발 강진서 화물차 덮쳐 노점상 사망도 철거 통지해도 대부분이 무시 생계 호소에 단속보다 계도 그쳐



11일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변에 복숭아 노점상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시민들이 갓길에 차를 대고 도로에 선 채 노점상에서 복숭아를 구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행락철 옥수수·복숭아·무화과 등 제철 농산물을 팔려고 국도변으로 나와 좌판을 펴는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량이 시속 80km 이상 쾅쾅 달리는 도로변에 많게는 수십 명이 줄지어 자리를 펴면서 노점상 안전뿐 아니라 차량 연쇄 충돌 사고도 우려돼 단속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직접 농사지는 산물을 가져와 파는 50~70대 노점상들의 '생계 곤란 호소' 앞에서 단속 공무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익산국토관리청 광주사무소와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등에 따르면 매년 6~8월 전남지역 국도변에는 줄잡아 100곳 안팎의 농산물 노점상이 장사에 나선다. 남쪽 바다를 찾아가는 피서객과 오래된 단골, 단순 통행 차량이 이들의 주 고객이다.

옥수수 수확철인 7월 들어서는 강진지역 도로변 곳곳에 옥수수 노점이 등장했다. 강진군 칠량면 국도 23호선 갓길에는 송산마을 인근 26개 농가가 좌판을 펴고 있다. 노점을 편 이들은 도로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민들이 대다수다.

다음 주부터는 화순군 주요 도로에 복숭아 노점이 줄잡아 40~50개는 펼쳐진다. 보성 앞바다로 이어지는 화순-보성 간 국도 29호선, 도곡온천으로 향하는 화순읍 계소리 지방도 55호선이 주요 포인드다. 복숭아 철이 끝나는 8월에는 영암을 중심으로 도로변에 무화과 노점이 줄지어 들어선다.

익산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불법 노점상들이다. 도로법상 도로 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

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도로변 농산물 노점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소 20년 이상 이러한 영업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생계 앞에서 단속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통상 도로변 노점 단속은 두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한 뒤,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강제 철거가 이뤄지면 노점상 운영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으나, 아직 과태료를 낸 사례는 없다고 익산청은 설명했다. 철거 계고장을 건네받은 노점상들이 다음 단속 때에는 잠시 좌판을 펴지 않다가 단속이 잠잠해지면 영업을 재개하는 탓에 강제 철거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역시 선풍 강력한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 떠야별에서 팔고 있는데 무

조건 법대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은 "도로변 노점이 차 사고 등으로 위험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속이 농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순에서 10년 이상 복숭아 노점을 운영 중인 최모(55)씨는 "손님들이 급히 차를 세우느라 사고가 날 뻔한 것을 수백 번 봐 왔다"면서도 "노점을 통해 평생 인연 맺어 온 단골도 상당한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는 건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편인 강진군 송산마을 이장은 "좌판을 열어야 얼굴을 맞대고 판매하면서 신뢰감도 주고, 저렴하게 팔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데 단속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문제다. 생계 곤란 호소 앞에 불법 노점 단속의 손길이 따른 약해질 수 있겠지만, 인명

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점 특성상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점 부근 갓길에 급히 차량을 세울 경우 충돌 사고가 예상되고, 노점상과 차량 충돌사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급기야 주말인 지난 9일 강진군 칠량면 송산마을 앞 도로에선 1t 화물차가 갓길 노점상을 덮쳐 옥수수 판매상 A(여·63)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직접 농사지는 옥수수를 팔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강진군과 익산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달 27일 불법 노점상 합동 단속을 했던 도로변이다. 변을 당한 A씨도 당시 단속반으로부터 "7월 15일까지 노점을 자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화순-강진 =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심야 굉음 오토바이 불법 개조 집중 단속

교통안전공단 이달부터 연말까지

심야까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광주일보 7월 11일자 6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광주·전남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요식업체, 주거밀집 지역 이면도로, 배달대행업체 인근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배기음이 현행 이륜차 소음 기준인 105dB(데시벨)을 넘도록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 소음기·LED전조등·차체변경으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미인증 등화장

치를 설치한 경우, 경음기를 추가 설치한 경우, 번호판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된다.

소음기, 전조등 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정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불법개조 이륜차 운행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교사가 인터넷에 과제점수 공개...인권 침해"

인권위, 주의 조치 권고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올린 행위는 인권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11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 (과제 생성·제출 및 수업 등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조별 과제 파일과 함께 조원들이 서로 평가한 참여 점수를 게재하게

했다. 그 결과 한 학생이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사실을 다른 조 학생들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점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조치는 두 달 뒤에 이뤄졌다. 이에 학부모는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개인 성격이나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속도 무용과 학과장 피의자 신분 전환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비리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해당 학과 학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A교수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올 초 진행된 '2022학년도 1학기 조선대 강의전담 교원' 선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복수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21일 조선대 총장과 교무처장, 무용과 학과장 등 모두 3명을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2단계 평가 절차인 '공개 강의'는 미리 공지한 주제(한국무용 기본 동작을 활용한 창작무용)로 20분 내외의 강의와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실시한다고 공지됐으나, 학교 측은 심사 당일 30분 전 질의응답이 없는 30분 강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단체는 무용과 학과장의 경우 채용 전형 중 하나인 '공개 강의' 및 학부 면접' 심사장으로 향하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첫 번째(특정 응시자)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학교 구성원에게 목격됐다"며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선대 교원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용과 학과장이 교원 채용을 앞두고 지원자에게 "3억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발전기금을 요구받은 지원자는 채용에서 최종 탈락했으며, 합격한 교수는 조선대 임용 전 다른 대학에서 입시생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입시비리 의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이와 관련해 11일 성명을 내고 "두 명의 무용과 교수를 지극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알바인 척...편의점 절도범 추적

광주서부경찰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적연기하면서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A씨는 당시 알바생인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을 '평일 주간 알바생'이라고 소개하고, 1시간여 동안 편의점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편의점 금고를 열고 현금 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B씨는 뒤늦게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말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